

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장기목표

The Policy on Population Aging: Achievements and the Need for Long-term Plans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의 특성변화로 인하여 다각적이며 즉각적인 정책적 대응과 함께 좀 더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근본적인 방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후의 성과를 예산과 성과지표를 통하여 계량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와 방향성을 모색해봄으로써 객관적이며 거시적인 준거들에 기초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논의의 중심점 강화와 노인의 참여기회 마련, 노인의 사회통합제고 지원정책의 강화, 고령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노후설계기반 마련 등이 향후 강조되어야 할 지향점으로 제시되었다.

1. 들어가는 말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의 특성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2000년을 계기로 사회적 아젠더로 확립된 이후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전사회적인 대응으로서의 고령화 정책의 단계로 전환하게 되었다¹⁾.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의 특성변화라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어,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다각적이며 즉각적인 성격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미래 노인세

대의 변화된 욕구와 특성변화도 급격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좀 더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근본적인 방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전사회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초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이 강제화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시에는 대통령 산하였지만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위상이 격하된 것은 적극적인 부처간

1)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2010), 한국경제60년사'에 기술되어 있음.

합의와 논의를 제한하게 된 아쉬운 점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현재까지 두차례 만들어졌으며 2차 기본계획은 그 동안 이루어졌던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²⁾.

첫째, 노인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공적 요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노인의 기본적 소득보장을 실현하였고 현 노인세대의 취약부분인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노인요양보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지워져 있던 요양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게 되었으며, 요양보호서비스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보급하였다. 둘째, 보건복지를 비롯한 주택·교통, 여가문화, 생활체육 등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부처 공동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개발이 시도되었다. 보건복지 영역의 경우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노후건강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적 주택·교통, 노후 여가문화 활동 지원, 노후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등이 시도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좀 더 계량화하여

살펴보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자칫 기존에 수립한 정책의 범위에 제한되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와 방향성을 모색해봄으로써 객관적이며 거시적인 준거틀에 기초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예산과 성과지표를 통해본 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고령화 관련 예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고령화 관련 예산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작시점인 2006년에 1조 4,030억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종료시점인 2010년에 5조 1,287억원으로 5년 사이에 3.7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5조 8,727억원으로 7년 사이에 예산 규모가 4.2배가 되었다. 이러한 예산의 증대는 크게는 경로연금을 대체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기인한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은 3조 9,8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7.8%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예산규모의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왔지만 예산규모의 변화양상은 정책종류별로 상이하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소득보장관련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시점인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증한 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노

2) 이삼식 외(2011).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요양보호기반확충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상 버스 도입 보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의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은 2009년 가장 큰 규모를 보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인 확대경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사업들이 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운동공간 확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2006년과 2007년 이후 관련 예산은 급감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독거노인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에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그에 따른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의 경우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사업 등이 새로 시작되었으며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회적 기업 육성이 대폭 강화되었다³⁾.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농림부의 전원마을 조성을 비롯한 마을특성 살리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2006년과 2007년 이후 감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고령화 대응 예산을 주요 주제

별로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되었던 2006년의 경우 건강보장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아 50.4%였으며, 다음이 소득보장관련 예산으로 고령화 예산의 22.4%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노동시장 참여기회 제공으로 11.8%,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이 10.7%이며, 활동적인 사회참여 여건조성관련 예산은 4.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예산구성은 2012년의 경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고령화 예산의 70.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장 관련 예산이 12%, 다양한 노동시장참여기회제공 관련 예산이 10.5%,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이 2.9%,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이 2.8%, 활동적인 사회참여 여건조성관련 예산이 1%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로 인하여 절대적인 고령화관련 예산이 증대되었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비중 또한 급증한 것이다. 반면 활동적인 사회참여 여건조성관련 예산은 2006~2012년 기간 중 증가와 감소를 거쳐 2012년 현재의 예산액은 2006년보다 적은 예산액이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예산상에 나타난 변화는 노후소득보장의 강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적인 사회참여 여건조성관련 투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예산 투입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표 2>에 의하면 근로연령인구중

3)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에 의하면 교육과학부에서 지방비(215억원)로 지식경제부는 비예산 사업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사업을 2012년에 실시하고, 외교통상부에서는 ODA 등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사업을 신규실시(891억원)하며,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업이 2011년 7억원에서 2012년 348억원으로 대폭 증대하였음.

표 1. 고령화 대책(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고령화 부문)¹⁾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14,030	17,620	33,481	47,727	51,287	54,434	58,727
1. 노후소득보장	3,147	3,356	22,355	34,179	37,150	39,480	41,620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5	11	5	5	6	908	941
- (경로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	3,142	3,345	22,280	34,144	37,144	37,934	39,830
-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²⁾	0	100	70	30	0	638	849
2. 건강보장	7,073	9,510	4,222	5,821	6,040	6,843	7,033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4,352	5,330	324	516	854	1,072	1,162
-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	2,721	4,180	3,898	5,305	5,186	5,771	5,871
3. 다양한 노동시장참여기회 제공 ³⁾	1,655	2,214	2,932	3,276	3,506	4,339	6,137
-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²⁾	552	592	1,098	639	593	901	2,697
- 노인일자리 창출	1,103	1,622	1,834	2,637	2,913	3,438	3,440
4.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627	981	1,386	1,481	1,625	426	583
5.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1,504	1,191	1,605	2,169	1,631	1,749	1,717
-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540	538	253	120	86	74	82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964	653	1,352	2,049	1,631	1,675	1,635
6.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24	368	981	801	1,335	1,593	1,637
- 독거노인	0	332	942	746	1,273	1,492	1,548
7.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	0	0	0	4	0

주: 1) 제1차(보완판 포함)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부문구성에 변화가 있었음. 또한 부문 내 영역구성에도 변화가 있었음. 따라서 부문 구성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에 준하여 정리하였으며, 부문내 영역은 주요 주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따라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성장동력' 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항목도 포함하여 제시하였음. 또한 제1차(보완판 포함)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대상별로 제시된 추진과제를 내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2)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성장동력' 부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 내용은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및 자산운영산업의 활성화임.

3) 독거노인과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관련 예산은 2006과 2007년은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포함되었으나 2008년부터 영역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1) 이삼식·이지혜(201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부합동,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각 년도.

공적연금가입률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노인의 비율이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중 급증하여 노후소득의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되었다. 또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 정립액도 그 규모가 아직 적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건강검진율과 치매검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매검진율의 경우 2008년에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치매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투여된 것이 그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관련 인프라 구축과 수혜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창출된 일자리는 2009년 이후 정체상태이며 정년채택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도 답보상태이다. 반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수는 2006년 227명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8배가 넘는 1,869명으로 급증하였다. 고령친화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입은 누적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수나 저상버스 도입대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즉 지속적인 예산투입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령과 같이 사회구

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3.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한계

고령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UN이 2002년 인구고령화 정책대응의 국제적인 준거틀로 제시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이다. 본 계획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노인문제가 노인

표 2. 고령화 대응 주요정책의 성과

(단위: %, 천건, 명)

성과지표 ¹⁾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59세 근로연령인구 중 공적연금 가입자수 및 가입률(%)	66.7	68.0	68.4	69.7	71.4
기초노령연금 지급자 비율(65세 이상 노인 대비)(%)	13.4	12.6	57.2	68.9	67.7
퇴직연금 정립액(억원) 증가율(%)	-	-	66,122	140,424	291,472
		27,550	140.0	112.4	107.6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검진율(%)	44.8	50.0	51.6	56.4	-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검진율(%)	0.4	1.5	4.1	6.7	10.3
65세 이상 노인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	2.8	5.1	5.7
노인장기요양시설 병상수(개) 및 구축률(%)	-	-	68,581	88,266	126,782
			110.6	16.6	136.0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수(천개)	83	116	126	210	216
정년채택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세)	56.9	57.0	57.1	57.2	57.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수(명)	227	585	997	1,497	1,869
고령층 정보격차치수	41.6	37.4	35.8	34.1	32.5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수(누적)	2,844	2,988	3,029	5,157	5,663
저상버스 도입대수(누계)	586	890	1,390	2,368	3,206

주: 1) 고령화와 관련된 성과지표 중 목표대비 달성률과 주관적 만족도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지표는 제외하고 정리하였음.

자료: 이삼식·이지혜(201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강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각 정부가 국가발전틀(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s)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처를 통합시켜야만이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을 연금수급자나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존재 즉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활기찬 노화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수동적, 의존적인 노인관에서 적극적, 독립적인 존재로 노인을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은 ‘노인과 발전’,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⁴⁾. UN은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정책수립의 모든 측면에 노인의 관심사를 주류화(mainstreaming)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연령특화된 정책(age-specific)을 발전시켜야 하며 세대 통합적이며 생애주기적인 접근(life-course approach)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류화를 위해서는 대중참여적 접근(bottom-up approach)이 필수적이며, 경제활동 참여와 다른 형태의 소득창출 활동, 의사결정과정(특히 노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의 참여, 광의의 사회문

화적인 삶에의 참여, 배제와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포섭과 주요 시민권 영역에의 노인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을 평가해보면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많은 부분이 제2차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류화(mainstreaming)와 대중참여적 접근(bottom-up approach) 중 후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⁵⁾. 또한 생애주기적 접근의 구현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발견되지 않으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공적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시민사회나 사적영역, 대중매체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범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협약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지속성과 적극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즉, 고령화는 더 이상 저소득 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 과제가 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할 즉각적인 정책적 대응은 비교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인구고령화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도록

4) 구체적인 주제와 행동목표는 '정경희 외(20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응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5) 정경희(2011).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교분석, 한양고령사회논집, 2(1), 2011년 6월, pp.29~50.

우리사회의 사회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4. 고령화 정책의 장기발전방향 모색

우리사회에 놓여진 많은 숙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 유지와 사회구성원의 삶의 제고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정책이 중단기적인 정책목표 수립과 실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영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하겠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통과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산하로 격상될 예정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민사회나 사적영역, 대중매체가 대응책 마련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전문가나 정책입안자와 같은 공적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령화와 관련한 다양한 NGO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진정한 대중참

여적 접근의 구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대중참여적 접근(bottom-up approach)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의 NGO의 활동이 선진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다는 것, 노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시민참여의 경험이 적다는 점도 고령화 관련 NGO 활동이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노인의 삶의 질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NGO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노인의 욕구와 기대를 명확히하고, 고령화가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고 있는가 여부를 감시하며,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전략이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고, 고령화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심을 환기하고 유지하는 노력 등을 수행해갈 때 진정으로 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된 고령사회의 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산구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초점이 노후소득보장에 집중되어 왔다. 향후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예산 투자와 좀 더 구체화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청장년층 중심의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노년기로의 전이가 유연하게 이루어져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연령분절적인 사회⁶⁾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경험하게 될 노년기

6) 연령분절적인 사회는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 은퇴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회로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령통합적 사회의 반대 개념임; Riley, M. W. & Riley, J. W.(2000). Age Integration:

의 '고독'이나 '무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민사회참여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화 관련 예산중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관련 예산은 미미한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층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인식제도 등과 관련된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 물론 정부의 예산투입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성취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민간영역의 참여 또한 요구된다.

다음으로 좀 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화가 고령친화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정책수행과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에이지 캠페인, 연령차별 모니터링 등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연령통합적인 가족, 사회, 근로환경 등

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경우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리적 환경 외에도 문화적인 고령친화성 제고 또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화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며 다른 사람의 노화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출산부터 사망까지 자신의 (남아있는) 생을 설계함으로써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는 바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생애주기적 접근의 구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문헌